

공공 공사 중심제 지역 건설업계 '좁은 문'

〈종합심사낙찰제〉

다음 달부터 공공조달 건설시장에 종합심사낙찰제가 본격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 참여 기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달청은 최근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안 설명회'를 열고 새로운 입찰제도 적용 준비에 들어갔다.

조달청의 기준안에 따르면 우선 중소기업 및 지역건설사들의 입찰참가기회 확대 방안이 배점으로 반영됐다.

중소기업 참여도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 항목 배점이 2점으로 현행 시범

조달청 내달 본격 적용 준비... 지역업체 입찰참가 확대 배점 반영 시공평가 만점기준 완화 요구안 등 미반영-업계 "대형업체 유리"

사업보다 2배 늘어났으며 사회적 책임 가점도 항목의 지역경제 기여도 배점도 0.4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중심제 도입으로 지역 건설사들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고 특정 업체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시공평가 만점 기준이 95점으

로 여전히 높고 배치기술자 평가도 지역 중소기업들이 보유하기 어려운 기준이 적용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시공평가 만점기준을 90점으로 완화하고 배치기술자 평가는 기준일 입찰공고일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동수급체 및 지역경제 기여도 배점 상향 조정만으로는 지역 중소기업의 활발한 공사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동수급체 및 지역경제 기여도 배점 조정으로 지역업체 참여 기회가 다소 늘어나겠지만 시공평가나 기술자 문제까지 함께 해결돼야 대형공사에서 중소기업의 공사 참여가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

도 4급 이하 승진자 89명 발표

도는 1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4급 이하 승진자 89명을 확정, 발표했다. 4급 승진은 산림개발연구원 심진규 사무관 1명이다. ▶명단 15면

담당(5급) 직위승진자는 총 29명으로 행정 15명, 전기, 화공, 녹지, 보건, 해양수산이 각 1명, 환경 2명, 토목 3명, 연구관 4명이다. 6급 승진은 21명, 7급 승진 28명, 8급 승진결정자는 10명이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인사

◇강원도

▼4급 승진 △심진규(산림개발연구원)

▼5급 승진 △강선구(회계과) △김양수(복지정책과) △김영균() △김호준(농정과) △박현봉(총괄기획과) △성수환(전략산업과) △유정숙(투자유치과) △유현주(관광개발과) △이극영(감사관실) △이상봉(경제정책과) △이형찬() △임계선(교육법무과) △최종필(총무행정관실) △허완(방재과) △현재호(총무행정관실) △홍동수(회계과) △이용환(에너지과) △이규석(산림관리과) △민인기(식품의약과) △김의경(환경과) △심문찬(수질보전과) △박영록(어업지원과) △박영성(지역도시과) △유재복(관광개발과) △유현모(처수과) △박영학(산채연구소) △정정수(작물연구과) △신정

철(대기평가과) △현근우(대기공학과)

▼6급 승진 △김종우(의정관실) △박소현(회계과) △박혜영(총무행정관실) △송경선(자원개발과) △윤정인(관광개발과) △이창열(기획관실) △이화영(관광마케팅과) △최대현(기획관실) △현종복(의사관실) △정봉진(의정관실) △한선희(감사관실) △김재철(빙상시설과) △정철원(환경과) △김기표(농정과) △조근영(환경과) △지영구(개발사업부) △김수미(환경과) △이명환() △고영도(지역도시과) △김규진(도로철도과) △한아름(감사관실)

높기만 한 종합심사낙찰제 기준

건설공사 시공실적·수행능력 높은 배점

영세업체 보호장치 없어 중·대형사 유리

올해부터 도입되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가 영세업체에는 불리하게 적용돼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강원도와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달청이 종심제 세부 심사기준안을 내놓았다.

기준안에 따르면 우선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공사수행능력 50점 △입찰금액 50점 △사회적 가치점(1점) △계약신뢰도(감점) 등으로 구성됐다.

수행능력 배점은 일반 공사의 경

우 △시공실적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5점 △배치기술자 10점이 적용되고 역량 항목으로는 △시공평가 점수 15점 △규모별 시공역량 3점 △공동수급체 구성 2점 등이다.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 △시공인력(15점)이 시공실적을 대신할 수 있고 △동일공종 전문성은 7점 △배치 기술자는 11점이 각각 적용된다.

또 가점 1점 중 지역경제 기여도를 0.4점으로 늘리고 공동수급체 구성 배점도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종심제 세부 심사 기준안이 영세업체에는 불리하다



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수행능력과 시공실적 등 높은 배점의 항목이 대형건설사와 중견업체에게 유리한 반면 지역경제 기여도와 공동수급체 구성 배점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강원도를 포함한 지역 영세 건설업체들은 시공평가 만점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지

만 반영되지 않았다.

또 지역의무공동도급과 지역제한을 명문화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역의무공동도급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불과해 외지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자칫 지역업체 특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역의무공동도급과 지역제한 명문화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종심제 심사 기준에 지역 영세 업체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도내에서 발주되는 중대형 공사도 이런 배점 기준이라면 도내 업체들의 수주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심진규 산림개발원장 4급 승진

강원도 4급·담당급 인사

강원도는 1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4급과 담당급 이하 89명의 승진 대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이번 심의결과 심진규 산림개발연구원장이 4급으로 승진했으며, 회계과 강선구 주무관이 담당급으로 승진하는 등 29명이 담당급으로 승진했다. 백오인

◇4급 승진

△심진규 산림개발연구원

◇담당급 승진

△강선구 회계과△김양수 복지정책과△김영균 복지정책과△김호준 농정과△박현봉 총괄기획과△성수환 전략산업과△

유정숙 투자유치과△유현주 관광개발과△이국영 감사관실△이상봉 경제정책과△이형찬 경제정책과△임계선 교육법무과△최종필 총무행정관실△허원방재과△현재호 총무행정관실△홍동수 회계과△이용환 에너지과△이규석 산림관리과△민인기 식품의약과△김익경 환경과△심문찬 수질보전과△박영록 어업지원과△박영성 지역도시과△유재복 관광개발과△유현모 치수과△박영학 산채연구소△정경수 작물연구과△신정철 대기평가과△현근우 대기공학과

담당급 이하 명단 kado.net

‘발주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입찰조건으로 명시 조사개시前 자진 시정면 ‘벌점’ 면책제도 활성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은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양 축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의 딱 막힌 하도급대금 물꼬를 트는 게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공정위와 발주처 간 하도급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하도급협의회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입찰 조건으로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등 발주처의 직접지급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와 하도급협의회를 구성할 발주처 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4대 공공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등 굵직굵직한 곳들이 검토되고 있다.

공정위는 한 해 12조원의 입찰을 집행하는 LH와 입찰 규모가 각각 7조원, 5조원대의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등과 하도급협의회를 우선 구성하고 지자체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자진 시정 면책제도(Amnesty)는 올해가 사실상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개시 전에 자진 시정한 사업자에게는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하고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 자진 시정한 경우엔 벌점과 과징금을 면제하는 게 핵심이다.

올해 하도급 분야에 대해 먼저 시행하고

유동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자진 시정 면책제도를 대한건설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해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통한 자발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중소기업의 경제민주화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중점 추진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피해 사례, 대처 방법, 구체 절차 등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배포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경험과 전년 대비 거래개선 체감도 등을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잠식하는 일감 몰아주기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하고 위반행위 성립 요건, 적용 제외 요건 등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법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일감 몰아주기가 포착되면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벌여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잠식을 방지하기로 했다.

소비자와 관련해서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 등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이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는 balconi 확장, 빌트인 가전 등의 경우 옵션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거나 옵션대금을 미납한 소비자에 대해 입주를 제한하는 약관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박경남기자 knp@**

평창군, 도시경관사업 2017년까지 241억 투입

평창올림픽 특구 도시경관지원사업이 본격화한다.

14일 평창군에 따르면 군은 2017년 말까지 총 사업비 241억원을 투입해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 올림픽 특구 내 올림픽 상징기로 조성사업을 비롯한 시가지 환경정비, 노후시설물 정비, 전선 지중화 사업 등을 벌일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까지 91억원을 투입해 전선 지중화 사업 및 일부 도시경관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도 36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군은 오는 4월까지 도시경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업관련 추경과 내년 당초 예산을 모두 확보할 방침이다.

횡계 시가지 일대 4km 구간에 130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전선 지중화사업은 오는 6월 완료된다.

군은 또 횡계 시가지 일대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노후 건물의 입면 개선사업도 시범건물을 선정해 실시한 뒤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림픽 개최도시에 걸맞은 품격 있는 경관 조성을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훈기자

(춘천~속초)

동서고속철 건설 다시 탄력받나

유일호 부총리, 필요성 강조

강원도의 30년 숙원 사업인 춘천~속초 동서고속철 건설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해 도가 강력히 주장했던 연내 추진이 무산돼 비판적인 기류가 흘렀으나, 새해 들어 정부가 사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낙관론이 되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취임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춘천~속초 동서고속철 사업에 대해 “중요성이 있다”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임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경제성을 보완해서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가경제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수장들이 일관된 견해를 내비친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동서고속철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에도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당시 유 부총리는 “동서고속철은 국가철도망계획에도 있듯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현재 경제성(B/C)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제성 논의가 포함될 예보다 당시 2차 점검회의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날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2차 점검회의를 이달 중으로 개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도는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만큼 이번 2차 점검회의에서 사업을 확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경제성 논의가 일단락되어야 다음달 예타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사업 추진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친 만큼 조기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동서고속철은 춘천~속초 간 93.95km 구간을 단선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이미 운행 중인 경춘선(98km)과 인천국제공항철도(70.8km)가 연결되면 인천에서 속초까지 2시간 이내 주파가 가능해진다. **정희훈기자**

486억 원주천댐 건설사업 ‘본궤도’

시, 연말까지 설계 완료 내년3월 착공 계획

총사업비 486억원의 원주천댐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원주시는 올해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기본·실시설계 용역사를 선정해 설계에 착수했다. 이달 중으로 도에 제출한 원주천댐 기본계획안이 승인을 받으면 설계와 함께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부면 신촌리 일대에 건설되는 원주천댐은 홍수조절을 목적으로 2014년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댐 건설사업 확정 통

보를 받았다.

이후 저수용량 확대 문제로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지난해 9월 사전검토위원회 심의를 통해 180만t급으로 최종 결정됐다. 높이는 약 55m, 길이는 약 292m 규모로 건설된다. 총사업비는 486억원으로 이 가운데 90%는 국비, 10%는 지방비로 충당된다.

시는 공사발주 시기를 내년 초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3월, 늦어도 상반기 내 착공한다는 방침”이라며 “공사 발주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댐 건설사업이 본격화함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오는 2020년 댐 완공에 맞춰 주변에 둘레길, 휴양림, 산악레저 체험장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희훈기자**

“지역경기 부양위해”... 올 건설공사 조기 발주

홍천군, 상반기 주민숙원사업 등 429건·698억원 집행 계획
춘천시, 도로관리·하천공사 등 121건·707억원 규모 달해

강원도 내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건설공사를 조기 발주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홍천군은 올해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기반조성사업 등 총 429건, 697억9800만원의 공사를 상반기 내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홍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측량·설계 합동작업을 벌이고 있다. 합동작업은 군 내 10개 건의 시설개선을 위한 설계를 합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설계능력 향상, 예산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합동작업으로 310건에 달하는 154억5600만원 분량의 사업을 차체 설계하고 있다.

군은 내달 12일까지 측량·설계 합동작업을 마무리하고 마을안길 확·포장 및 용·배수로 등 소규모 시설개선 공사를 우선적으로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전영재 군 건설방재과장은 “엘니뇨의 영향을 고려, 해빙과 동시에 건설사업의

조기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 조기 발주는 연말 예산 집행의 쏠림을 방지하는 등 지방재정의 균형 집행 효과도 가져온다”고 말했다.

춘천시도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예정된 주요 건설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기 착수하는 주요사업은 121건에 총 707억원 몰량이다.

분야별로는 도로관리 46건 213억원, 도시재정비 6건 80억원, 건축관련 10건 102억원, 하천공사 5건 93억원, 지역개발 52건 75억원, 경관 6건 30억원, 도시계획 5건 22억원 등이다.

도로관리사업은 춘천시청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적십자사~향교 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거두리~장학리 간 도로 개설, 공지천 포장마차촌 주차장 조성 등이 있다. 도시재정비사업으로는 약수변공원, 경관사업의 캠프페이지 평화 메모리얼 조성, 만천·신촌·금산·수정·은수천 등 5개 하천의 정비 예산도 모두 조기에 집행한다.

52개 지역개발사업 중에는 서면 일원



마을 안길 정비, 덕두원리 도로 및 배수로사업, 남산면 수동2리 도로개설 등이 조기 집행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동안 실시설계를 진행해 오는 3월까지 모두 마칠 계획이다.

또한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토지 및 건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도 내달까지 마

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월부터 해당 사업들은 착공에 들어가 준공 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전역에 걸쳐 도시개발이 이뤄지는 만큼 관련 예산 또한 조기에 집행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희훈기자 hoony@

한은은 내년 건설투자 증가율을 2.8%로 예상했다. 한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내렸다. 지난해 10월 내놨던 전망치(3.2%)보다 0.2%포인트 낮다.

한은은 “민간소비가 지난해 가계의 실질구매력 개선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다만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주택 매매거래 둔화 등이 소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주열 총재는 “물가 전망을 하향한 것은 유가 등 공급요인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상반기에는 국제 유가가 30달러 후반, 하반기에는 40달러 후반이 될 것으로 전제하고 경제 전망치를 추산했다”고 말했다. 최남영기자